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

의안 번호	109
----------	-----

발의연월일 : 2024. 6. 4.

발 의 자 : 황정아 · 한정애 · 문금주
김용만 · 송옥주 · 윤건영
허영 · 주철현 · 박민규
민형배 · 이재관 · 김현
박희승 · 김원이 · 김남근
김성희 · 김영호 · 송재봉
서영석 · 이병진 · 손명수
김현정 · 임미애 · 김영환
김동아 · 문대림 · 조인철
한민수 · 문진석 · 최민희
양부남 · 남인순 · 이기현
강유정 · 이건설 · 이학영
복기왕 · 이용우 · 박정현
정진욱 · 염태영 · 김태년
이용선 · 장종태 · 이재강
채현일 · 전진숙 · 이훈기
고민정 · 노종면 · 김기표
김문수 · 정동영 · 이수진
김우영 · 이정현 · 이상식
의원(57인)

주 문

일본 정부는 라인에 대한 총무성 행정지도의 목적이 적절한 위탁 관리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 행정지도에는 ‘경영 체제 재검토’ 관련 내용을 여러 번 명시하며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행정지도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난 배경을 ‘위탁처에 대한 관리감독 미진’이라고 꼽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행정지도에 담기지 않았다.

게다가 라인야후가 네이버 출신이자 라인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CPO마저 이사회에서 배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고, 소프트뱅크도 라인야후 지분을 추가 매입하려고 하며 사실상 일본이 네이버의 라인 강탈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통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강탈 시도로 인해 기술 유출, 고용 불안, 국내 IT기업의 해외 진출 걸림돌과 IT 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같은 악영향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5·26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가 “한일관계랑 별개 사안”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일본의 입장이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 같다”며 일본의 거짓말을 용인했다.

라인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서비스에 성공한 IT 플랫폼이자 일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각지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가졌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금융, AI 등의 기반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라인을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침탈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을 일본 정부에 경고하고, 대한민국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라인 강탈 야욕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행정지도라는 명목하에 법적 근거 없이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에 대해 명백히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민간 기업 강탈 시도를 사과하고,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위한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태를 강력히 항의하고,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합당한 상응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라인은 2011년 출시한 메신저로 페이와 웹툰, 쇼핑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연계된 애플리케이션임. 특히 글로벌 누적 이용자는 10억 명에 달하는 IT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했음.

네이버는 2021년 소프트뱅크와 합작회사인 A홀딩스를 세웠고, A홀딩스는 상장사 라인야후의 최대주주가 되었음. 하지만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음.

라인야후 측이 행정지도에 대해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책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총무성은 2차 행정지도를 통해 7월까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라고 하였음.

이에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소프트뱅크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입을 공식화하고,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네이버 출신 CPO는 사내이사에서 퇴임하게 됨.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IT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명목으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 하도록 압박하는, 사실상 적대국에게나 할 법한 기업 강탈 행위에 나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또한 라인 사태가 실제 지분 매각으로 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와 국제법적인 대응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라인 강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라 경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